

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금광연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8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7일

발 의 자 : 금광연·강성삼 의원

1. 개정이유

- 가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에서 가축사육제한으로 「축산법」의 축산업을 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.
- 나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의 토지거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축사에서 「축산법」 규정의 ‘축산업’을 경영하여야 함.
- 다. 「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 등)를 일부 개정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토록 함.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(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) ②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예외 조항 8호에 ‘「축산법」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’ 신설
- 나. 부칙
- 신설된 제8조②항 8호는 개정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7. ~ 7. 13.

○ 의견 내용 : 해당사항 없음.

바. 부서협의 결과(하수도과)

⇒ 부서협의 기한(6.26.~7.7.) 내 회신없음

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

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1리터당”을 “리터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례가”를 “조례로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”를 “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8. 「축산법」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
가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)

제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| 행 | 개 | 정 | 안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4조(수집 ·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· 징수)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 ·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을 징수 할 수 있으며, 수집 · 운반업자가 수집 ·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 · 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| 제4조(수집 ·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· 징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 제4조(수집 ·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· 징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2. 수집 · 운반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(“하수처리장”을 포함한다. 이하 “처리장”이라 한다)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를 가축분뇨 수집 ·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<u>1리터당 1원</u> 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다만, 1천리터 이하로 수집 · 운반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차감 징수 한다. |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리터당 ----- ----- -----. | |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 | |

③ 수집·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.

제7조(가축사육의 제한)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구역(이하 “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
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
제8조(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③ ----- 조례로 -----.

제7조(가축사육의 제한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-----

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-----

제8조(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---- 그렇지 않다.

니하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③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축사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(생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「축산법」 규정에 따른 부
화엽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
계류하는 가축

③ -----

그 밤에 -----
-----.

마련-----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